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성인지적 분석

---

2020.11.25.(수)

김둘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목 차

요약문 .....	1
1. 개요 .....	2
2. 【잠깐!!】 제4차 기본계획의 성별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	4
3.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5
I.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6
II.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8
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8
②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19
③ 농어촌 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	26
④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29
III.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추진체계의 성별 균형 참여 반영 필요 ....	43

### ◆ 참고문헌

## 요 약 문

### □ 발표문 의의 및 한계

- 【의의】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되새겨 보는데 의의가 있음. 남녀 농어업인의 현실과 특성, 정책요구 차이가 무엇인지, 이를 향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한계】 법정 중장기계획에 대해 성 인지적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녀 농어업인의 현실과 정책요구에 대해 실증조사가 필요함. 하지만 본 발표문은 실증조사를 하지 못하고 주로 문헌조사에 기반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음

### □ 주요 분석결과

- 비전 및 목표 : 남녀농어업인에 대한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요 목표 수준에라도 ‘성차별 해소, 또는 성평등 실현’을 포함할 필요 있음
- 주요 정책과제
  - 일부 정책과제에서는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예,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전반적으로 정책과제에 대해서 성 인지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예, 관련 인적통계 제시하는 경우 성별 구분 없음. 정책 목표 설정시 성별구분없이 목표 설정 등)
  -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는 남녀 농어업인의 현실과 정책요구 차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여성농어업인 관련 핵심 이슈인 법·제도적 지위개선, 대표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추진체계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핵심과제 참여자 모두 남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진 구성(11명)에서 연구총괄책임자 외 1인 여성
  - 삶의질 위원회 : 성별구성 ??
  - 이행점검 지표구성 및 추진체계에 젠더 이슈 포함 및 성별 균형 참여 필요

## 개 요

###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20.2).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소식마당 ‘(정책자료) 제4차(20~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  
<http://www.krei.re.kr/committee/selectBbsNttView.do?bbsNo=113&key=474&nttNo=133158> 2020.10.13.인출

## I. 개 요

□ (성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 1차 기본계획: 2005~)

○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

○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립하는 **법부처\*** 계획

\* 국무조정실(총괄), 농식품부(간사), 해수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21개 부처·청

□ (주요 내용)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시책을 포함

### 〈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내용 〉

-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여건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 ◇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 등

□ (수립 절차) 관계부처 합동 **‘삶의 질 위원회(총리 주제)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 II. 제4차(2020~2024)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전략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❶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❷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❸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❹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❶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❷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❸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❹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❶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❷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❸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❹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❶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❷ 농어촌 관광 활성화 ❸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❹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추진기반	○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편, 사전협의 제도 도입 및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 제정을 통한 삶의 질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범부처 정책 조정 ○ 농촌협약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제도화	

## -제4차 기본계획의 성별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 성별 관련성: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요구가 있는 정도

구분	내용	성별 관련성 체크 (● 강함, △약간 있음, × 없음)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고차·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추진전략	주요 과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계족와 포용적 공동체 육성	①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②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③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④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①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②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③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④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①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②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③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④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①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②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④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 분석지표

- 여성가족부 제공, 법정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젠더이슈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법정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성별영향평가 항목		점검 point
I.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li> </ul>
	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li> <li>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li> <li>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li> </ul>
	II.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②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li> <li>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li> </ul>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 신설·수정 등 개선방안 제시</li> </ul>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p37

## I.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 ① 현황

#### 【제4차 농어업인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비전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목표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과 목표】



### ② 젠더 이슈

- 제4차 농어업인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는 여성농어업인 또는 성평등, 남녀 평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농어업인의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 과제를 주요 목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인식한 결과로 여겨짐

- 농어업인의 성차별 이슈를 부수적인 문제로 인식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 이슈를 주되게 설정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검토 필요

==> 따라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국내 여성농어업인의 현실과 삶은 별도의 육성법과 5개년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따라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제4차(2016~2020)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비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17~’ 21)의 비전: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분야 발전 도모’
- 농촌여성의 성평등 이슈는 최근 세계적으로도 주요 이슈였음(조혜승, 2018. 해외 출장복명서 ‘제62차 유엔여성지위원회 ’ 참관 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엔여성지위원회 주요 의제 : (2012) ‘농촌여성의 역량 강화와 빈곤 및 기근 근절, 개발 및 현재 도전 과제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 (2018) ‘농촌여성 · 여아의 성평등 및 역량강화 달성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농어업인의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수준에 ‘성평등 실현, 성차별 해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 있음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 이슈를 주되게 설정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검토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해서는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평등하게 참여기회를 가지며, 일한 만큼 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절실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수준에 ‘여성농어업인 또는 성평등 실현, 성차별 해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정책을 단순히 ‘끼워 넣기’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의 기획과정 · 수립 · 집행 ·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될 수 있음.

## II.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1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1-1.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 농어촌 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의료 취약지 해소 및 예방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 여건 개선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 ② 젠더 이슈

- 여성농민 특수 질환
  - 도시여성이 소화기계통 질환이 많은 반면 여성농민들은 대다수 질환에서 유병률이 높지만 특히 근육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다는 특성이 있음. 농사·가사 이중고 여전... 근육골격계질환이 많고 우울감 경험도 늘어. 건강관리실 활용 필요, 여성농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 필요(한국농정신문, 2019. 09. 29.)
  - 농촌 여성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중 유병 수준이 높은 질환군은 관절염, 골다공증등 근·골격계 질환임. 여성 농업인들의 만성질환의 39.7%는 미치료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자원 공급은 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함.(류기덕, 2007)
- 농촌 여성노인의 우울감 높음
  - 면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우울은 성공적 노화와 역상관관계에 있음. 특히, 남성 노인 보다는 여성 노인,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농촌지역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 문제 해결 필요. (신소희·장금성·최은, 2019)

- 농촌거주 여성독거노인의 우울정도는 도시거주 독거노인보다 높음(김은경, 2015)
  - 독거여성노인의 우울정도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음. 단, 농촌여성노인의 41.3%와 도시독거노인의 39%가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농촌거주 여성독거노인이 도시의 경우보다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지만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음(평균 TV 시청시간이 더 긴 것으로 밝혀짐)
  - 하루 평균 TV시청시간, 친구 수와 친구 접촉빈도가 농촌여성독거노인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과 도시 여성독거노인 두 집단 모두 운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우울척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신옥순, 2019)

-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과 조절요인을 파악한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혼인상태, 건강 상태, 생활 수준, 학력순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됨, 생활 스트레스의 가족 문제, 경제문제, 주거 문제, 상실감 순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침.
- 우울을 완충하는 조절요인으로서는 심리적 복지감의 자아존중감, 타인과의 관계, 목적감 상호작용 순으로 관찰됨.
- 높은 자아존중감, 외부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갖는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높게 조절하여 우울을 완충할 수 있음.

○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프로그램 효과(김민경·박기수, 2019)

- 보건진료소의 12주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농촌여성노인들의 건강생활실천능력을 향상, 유연성과 근력평가, 민첩성 등 운동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 지표가 나타남.

○ 농촌 남녀노인의 사회연결망과 건강(박경순·박영란, 2016)

-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신체적·정신적·전체적 건강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등 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 때문으로 분석됨.
- 모든 인구사회학적 범주에서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남성노인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 유배우자의 경우 남성 유배우자의 건강상태보다 더 나쁘게 나타남.
- 사회연결망의 경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더 작고 밀도가 낮으며 상호작용의 강도가 낮음. 이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따라 연령에 의한 불이익과 여성이라는 불이익을 동시에 받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보고서(안석·엄진영·박지연, 2018: 74-75)
  - 건강상태 인식 조사 결과 : 60대 이후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움 :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 (33.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이어 바쁜 농사일로 ‘병원에 갈 시간이 부족’ (50~60대), ‘의료 서비스 부실’ (30대) 등으로 높게 나타남.
- 농촌 여성 노인, 남성보다 건강 상태 나쁘고 우울감 높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7년 실시한 ‘농어촌 노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지역의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삶이 질이 남성 노인보다 낮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우울 수준·자립도 등에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져(한겨레신문, 2019. 06. 14.)
- 충남 여성어업인 실태조사(임우연 외, 2017)
  - 충청남도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가가 많은 지역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국 어가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가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또한 타 지역에 비해 60대 이상의 노인 어업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노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보통’ 수준 (130쪽)
  - 어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질환 : ‘허리통증’ (83.4%), ‘목 및 어깨 결림’ (75.3%), ‘손발 저림’ (58.8%), ‘어지러움’ (19.4%) 등 (132쪽)
    - 2016년 도서지역 거주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라남도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팔과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인 관계로 어깨 결림과 손발 저림이 높은 순위로 나타남
  - 의료기관(시설) 이용시 어려움 : ‘의료시설 및 장비 부족’ (40.0%), ‘의료진 전문성 부족’ (22.5%), ‘고가의 의료비용’ (17.5%) 등 (140쪽)
  - 여성어업인 정책지원 중요도 및 필요도 : ‘건강 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191쪽)
- 전남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 2017년 ‘전남 여성어업인 생활 실태조사’ 에 따르면, 여성 어업인들의 성어기 평균 노동시간은 7.56시간이고, 어한기에는 2.44시간으로 위험환경에서 장시간 어업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가사 일 전담 또는 다양한 겸업이 이루어짐.
  - 건강의 경우 어깨 결림(27.2%), 손발 저림(19.3%), 요통(11.3%) 순으로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고 보건소의 건강증진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여수투데이, 2017. 02. 13.)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 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12쪽)</li> <li>○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예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21) 추진을 위한 검진기관, 항목, 사후 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 구축 및 검진(550명) 실시</li> <li>- 건강검진추진을위한세부사항을 담은 「여성농업인육성법시행규칙」 개정</li> </ul> </li> <li>○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지원 및 취약농가 대상 인력지원(‘행복나눔이’) 지속(20: 29천 가구)</li> </ul>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촌여성정책팀 시행계획 보고서.
2020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p>&lt;여성맞춤형 서비스 확대&gt; (7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중점 관리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어로작업과 질환의 연계성을 조사하고 여성 어업의 질환·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li> <li>* (20년 현황) 경상대병원, 조선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3년 단위로 지정)</li> </ul> </li> <li>○ 여성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제도 도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어업인의 건강 위해요소, 질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3억, 1,200명)</li> </ul> </li> </ul> <p>&lt;찾아가는 서비스 제공&gt; (8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낙도 및 낙후지역 주민의 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안전보건센터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낙도지역 어업인의 ‘안전쉼터 조성’ 지속 추진</li> </ul> </li> </ul>	해양수산부(2020), 소득복지과 시행계획보고서.

- 마을단위 보건소 장비 및 인력 부족, 종합 건강복지센터의 건립 필요, 여성농민 관련 질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최소 1개군에 1개소는 설치해야.(프레시안, 2014. 02. 11.). (2020년 현재 상태??)
- 여성농업인에 특화된 보건 프로그램 필요
  -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남성보다 농사일 이외의 휴식시간이 적은 편. 남성 농업인과 하는 일도 다르고 신체조건도 다르며,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 없이 가사와 육아로 쉴 틈이 없어 특화된 보건 프로그램이 필요함.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확충이 필요. (농촌여성신문, 2017. 09. 22.). (2020년 현재 상태??)

## 1-2.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 고령화, 과소화가 심화되는 농어촌에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및 농어촌형 서비스 제공모형 개발·확산 추진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 통합 돌봄 인프라 조성
- 농어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개발 및 확산

## ② 젠더 이슈

### ○ 농촌마을의 비공식적 노인돌봄 사례(윤순덕·채혜선, 2016)

- 전통형 농촌마을 사례에서는 가족이 해주지 못하는 돌봄의 대부분을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해결하고 있음.
- ==>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돌봄은 기초적인 단계이기에 복지프로그램 등 공적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도시근교형 농촌마을 사례에서는 노인들이 자식들과의 왕래가 빈번하여, 마을회관 등 공동 공간을 이용하여 여가생활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적극적 의미의 노인돌봄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도농복합형 농촌마을 사례에서는 마을 주민들간에 오고가는 비공식적 노인원조보다는 시의 공적 복지혜택에 주로 의존함.

### ○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김유진, 2016)

- 지역사회 의 일상적인 생활 돌봄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공동생활거주제를 살펴본 결과, ‘공동생활거주지의 독거노인과 지역사회 간의 분리 현상’ 이 뚜렷하게 나타남.
-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이용,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지역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공적 부양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고독사 위험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는 취약 계층 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함.
- 공동생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여성농업인/어업인 실태조사 : 돌봄 요구 상대적으로 낮음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농업인에게 필요한 여성관련 복지시설 수요조사 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65.9%), 가정폭력상담소(41.0%), 성폭력상담소(25.4%) 이주여성상담소 등. (안석·엄진영·박지연, 2018: 83)
-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시급한 과제로 ‘아동/노인 돌봄 지원’ 은 2.97% 정도에 머무름. (임우연 외, 2017)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 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5쪽) ○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지원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 지역별 농촌노인 적합 소일거리 및 공동체 활동 품질향상 지원 * 가공·위생, 경영·마케팅, 마을재생, 안전등전문가컨설팅팀구성·운영 (4~10월, 10개소) - 지역별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우수사례 발굴·확산(10개소)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촌여성정책팀 시행계획 보고서.
2020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 여성어업인을 위한 돌봄 정책은 발견되지 않음	해양수산부(2020), 소득복지과 시행계획보고서.

- 노인 그룹 홈(Group Home) : 가정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양로요양시설, 수발 보호 기능을 합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노인공동생활 가정의 도입 필요 (충청남도미디어, 2015. 09. 24.)
- 사회적 농업조직은 정부 지원(운영비·네트워크 구축비)을 통해 농촌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여성, 귀농 희망자 등과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필요(신아일보, 2018. 12. 28.)

## 1-3.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육아서비스 기반 확충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② 젠더 이슈

- 농어촌 보육 문제의 어려움
  - 보육시설 접근성의 문제 (아동의 이동시간 및 보육시설의 교통부담 문제)
  - 보육 수요와 육구 면에서 농어촌 지역 영아반은 유아반보다 정원미달이 적고 정원초과가 많음 (교사인력 등 여건이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
- 아동 대 교사 비율 등 기존 제도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
- 조손가정, 국제결혼가정 등 가정환경 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기존 보육 사업의 문제점(김은설·이정원·박진아·조혜주, 201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만족도 면에서 맞춤형 서비스 및 적용 기간의 확장, 도서 벽지 지역 지원 등 개선이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아이돌보미 자격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 여성들에 대한 아이돌보미 교육 기회를 제고하면 일자리 창출까지 목표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 전망.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중소도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농촌에서 접근성이 떨어짐. 기존의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이 센터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여성농업인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복지지원 필요

“타 직종에 비해 여성 농업종사자는 생업인 농업과 출산·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특히 청년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부족한 실정. 여성농업인에 대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복지지원 등 대책 마련 필요”(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 세계타임즈, 2020. 03. 12.)

“농촌 마을일수록 방과후 돌봄이 절실한데, 방과후 학원을 갈 수 없는 벽지마을의 경우 공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실정. 이로 인해 자녀 교육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음. 농번기 새벽과 저녁 시간에 특히 농촌형 아이 돌봄 실현이 필요함. 복지회관을 활용한 돌봄공간 조성이 필요”(충북, 박은경 향수뜰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국장, 충북일보, 2020. 07. 28.)

○ 여성농업인/어업인 실태조사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보고서의 자녀 돌봄 및 자녀 교육 관련(안석·엄진영·박지연, 2018:84),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 ‘어린이집’ (55.5%), ‘집에서 돌본다’ (27.4%) /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돌봄 :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54.5%), ‘집, 이웃 또는 친구집’ (9.0%) 등.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근처에 보육시설이 없음’ (34.2%),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 (25.8%), ‘교육내용이 부실하다’ (10.2%) 등.



- 농촌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 : ‘가까운 거리’ (32.8%), 좋은 보육 시설(25.2%), 저렴한 비용(21.1%)
-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시급한 과제로 ‘아동/노인 돌봄 지원’ 은 2.97% 정도에 머무름. (임우연 외, 2017)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 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모성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13쪽) ○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지원 확대 ○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촌여성정책팀 시행계획 보고서.
2020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8쪽) ○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일손 확보 지원 - 임신·출산, 다문화가정,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 어촌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 확대('19. 12 → '20. 15천원) * 여성어업인 조직활동 제약 요인 : 집안일(40.4%), 경제적 어려움(25.1%)(수산경제연구원, '19)	해양수산부(2020), 소득복지과 시행계획보고서.

- 농식품부가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의 예산 확장을 위해 수요조사(한국농정, 2020. 04. 05.)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2019년 37개소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 60개소(국비 6억1,300만원 규모)로 확대 지원
- 이동식 놀이교실 역시 6개소에서 7개소(국비 5억8,500만원 규모)로
-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14개소에서 23개소(국비 4억2,000만원 규모)로 각각 지원을 늘림.
- 여가부 시책(쿠키뉴스, 2020. 02. 24.)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15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다양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돌봄 공동체가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품앗이형’, 마을의 주민 모임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형’,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공동체 등 발굴 예정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기존 보육 사업 개선방안(김은설·이정원·박진아·조혜주, 2014)
- 농촌 지역 어린이집의 차량운행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 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 지원 방안
- 교육 인프라의 소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구성 보조금 지원 방안
- 충남 농어촌 마을단위 육아지원 모델 사례: ‘우리마을 돌봄나눔터’ (최은희, 2018)
  - 자치적 돌봄활동에 대한 교육 기회 마련
  - 찾아가는 육아지원 파견 및 이동서비스 제공
  - 다양하고 공신력 있는 육아정보 제공
- 충남홍성군의 여성친화 농업정책(충청남도미디어, 2020. 02. 20.)
  - 2020년 농가도우미 사업에 2천 8백만 원을 지원...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업무를 지원하며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180일 중 최대 45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홍성농협여성농업인센터와 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으로 고충상담, 보육시설, 영농기술 및 교양강좌, 건강·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
  -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에 추가 예산 증액 등

## 1-4. 농어촌 사회 안전망 내실화

◇ 노령·취약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정 및 농어작업 관련 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업인·농어촌 주민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강화
- 농어업인 작업 안전 보장
- 노령 및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② 젠더 이슈

- 여성 농업인들의 안전실태(농촌여성신문, 2019. 10. 25.)
  - 실제 농약살포 현장에서 방제복 등을 입지 않아 중독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실제 살포

하는 남성 농업인보다 보호장비 착용 없이 농약이 잔류하는 논밭에 제일 먼저 들어가 쭉  
그리고 수작업을 하는 여성 농업인의 중독이 심한 경우가 많음.

- 여성농업인은 ‘넘어짐’ 사고 발생률이 남성보다 2배 높으며, 어깨 및 허리 등의 질병  
경험률 역시 남성보다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24%로 남성의 40%보다 낮게 나타남.

(안동MBC, 2020. 10. 16.)

- 여성수산인의 참여확대 등의 정책 수립·시행에서 더 나아가 개별법에 더욱  
구체화된 실체규정이 필요함.(엄선희 외, 2017)

- 여성수산인의 수산업 참여 기회 보장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적극적 조치 및 근거규정이  
필요.

-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정관 또는 어촌계 정관 등에 여성어업인 수  
쿼터제 규정 도입 필요

- 여성농업인/어업인 실태조사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연금 및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 : 전체 여성 농업인 가구의 28.8%(남편 명의 가입 22.1%, 여성농업인 명의의 가입  
4.6%, 가족 명의 가입 3.8%). (안석·엄진영·박지연, 2018:77)

-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 안전 체감도 : 보통 미만의 낮은 체감도,  
즉 불안도를 나타냄 ( ‘자연재해’ 는 부정 응답비율이 40.3%로 나타나는 등, 범죄위험,  
선박정비불량, 어업중 안전사고 등 모두 보통 미만의 낮은 안전 체감도).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의 경우 충남 여성도민의 체감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안전 인식을 보임.  
(임우연 외, 2017)

- 농촌여성 안전대책 시급

- 농촌지역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안전대책이 시급함. 강원지방경찰청은 농촌지역 여  
성 안전 확보를 위해 원룸지역 순찰강화, 가로등 설치 건의 및 여성경찰의 적극 활용 등  
운영 계획.(홍천뉴스, 2016. 06. 22.)

- 농촌지역에 여성 및 청소년들의 밤길 안전 문제, 빈집털이 범죄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나타남. (신세계 보건복지통신, 2017. 01. 17.)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 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p>&lt;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gt; 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11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욕구를 반영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li> <li>○ 여성농업인의 산재형, 골절재해 특약 등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교육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시군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농작업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하고, 농업작업 재해 사전예방 및 사후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독려</li> </ul> </li> <li>*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19.11월)</li> </ul>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촌여성정책팀 시행계획 보고서.
2020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p>&lt;여성친화형 작업기반 구축&gt; (7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집약적이고 재해 발생률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편리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여성친화형 어업 근로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화·경량화, 특수기능 작업복 등 여성어업인 및 고령어업인 맞춤형 어업 기자재 개발을 위한 R&amp;D 로드맵 수립(KMI)</li> </ul> </li> <li>○ 여성어업인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장성이 강화된 특약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어업인 발생 빈도가 높은 재해골절 진단비를 보장하고, 사망보험금 연장특약(보험종료 후 30일) 도입 등 추진</li> </ul> </li> </ul>	해양수산부(2020), 소득복지과 시행계획보고서.

-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 관련 정책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예방·보호에 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제시된 관련 인적 통계들은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성별 현황 및 목표치를 알 수 없음. 향후 인적 통계는 성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p.43)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 18) 63.3% → (' 22) 70 → (' 24) 75

==> (개선안) 남성 농업인 ??, 여성 농업인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 18) 47.4% → (' 22) 52 → (' 24) 55.6

==> (개선안) 남성 어업인, 여성 어업인(수산인?)

- 성별에 따른 특정 유해인자 노출 관련 건강관리 제도 필요(농촌여성신문, 2019. 10. 25.)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대,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빅데이터 수집 분석 등 시행 필요.
  - 여성농업인이 또 다른 여성농업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 필요.
  - 2021년 ‘여성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입’ 뿐 아니라 특정 유해인자 노출 관련한 건강관리 제도가 성별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야 함(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약 노출도가 높고, 보호구 착용률도 낮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 지역별 농업안전보건센터 확대 설립,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행 등 필요.

- 여성농업인의 건강 안전을 위해 언론 측면에서도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필요.
-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 대상 안전사고 예방 실천 운동 추진
  - ‘넘어짐’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사고예방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 작업환경관리, 작업화 착용, 작업절차준수 등의 실천과제(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18. 02. 22.)
- 발농사가 많은 진안군에서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수확용 앞치마, 농작업 모자, 보호안경 등 300여 회원에게 지원.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실천에 도움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투데이안, 2018. 05. 04.)
- 농촌여성 안전을 위한 CCTV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거리의 밝은 가로등, 스마트폰으로 집 안팎과 농장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신세계 보건복지통신, 2017. 01. 17.)

## 2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2-1.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 통학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 복지 수준 향상 및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증진
-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 제공

### 2-2.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강화

◇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기반 구축을 통해 농어촌 지역 생애 주기 별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② 젠더 이슈[2-1. 2-2]

- 여성농어업인의 주체적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개발 및 지역 리더 양성 필요
  - 그러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개발 및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제4차 기본계획이 여성농어업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검토 필요(예: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전문직업인? 농어업 보조자?)
- 인권위 “농어촌 평생교육·경로당 지원 확대 근거 마련해야“(연합뉴스, 2019. 06. 14.)
  - 한국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다 보니 노인들이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 특히 여성 노인은 교육 및 소득수준이 도시 거주 여성 노인보다 낮고, 동거자 없이 홀로 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인권위는 경로당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 노인의 인권증진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권고함.
-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전체 44.3%이고 농업 관련 생산 기술, 판매 및 마케팅 교육 경험이 많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비율이 높음.(라이선스뉴스, 2019. 04. 19.)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체로서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함.
- 여성 농업인/어업인 실태조사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안석·엄진영·박지연, 2018:65) 결과, 교육 참여율은 다문화 여성>귀농>일반농>고령농 순으로 높았고, 주요 교육 내용은 취미, 여가, 교양 > 농업생산기술>판매 및 마케팅 교육 > 농산물 가공 기술>소형농기계 작동법 순으로 높았음. 유익한 교육 내용은 취미, 여가, 교양>농업생산기술 순으로 나타남. 향후 희망하는 교육 내용 : 85.9%가 향후 교육을 희망(60대 이후에서 교육 수요가 감소) 취미, 여가, 교양 교육의 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남(특히 7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이상 높은 욕구를 보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은 농사나 가사일을 대신 할 사람이 필요 > 가까운 교육 장소 > 농한기 교육 실시 > 저녁시간에 교육 실시 등
  -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임우연 외, 2017), 어업 관련 교육 참여 정도는 1년에 1~2번 참석(36.3%), 참석 경험 없음(10.6%), 거의 참여하지 않음(37.8%)으로 나타났고, 50대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참여도를 보임. 어업 관련 교육

참여 시 애로사항은 바쁘고 시간이 없다(40.6%), 가사와 돌봄일로 집을 비울 수 없다(33.4%), 여성 어업인에게 참여 기회가 적음(10.9%) 등으로 나타남. 향후 희망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취미, 여가, 교양(18.6%) 위기 대처 및 안전교육(15.0%), 관광사업(13.3%), 정보화(11.3%) 등으로 조사됨.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요구는 여성어업인 전문성 향상 기술교육 훈련(24.5%), 여성어업인 일손 돕기(16.1%), 여성어업인 우대제도(12.8%), 여가 및 문화활동 바우처 제공(12.2%) 등으로 나타남.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 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p>&lt;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gt; (9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정원 '농업교육포털'을 활용 교육기관별 교육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탐색하여 교육기관에 제공</li> <li>* 교육기관의 교육분야 및 수준별 여성 참석현황, 성별 교육현황 등</li> <li>- 농식품공무원교육원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기획력, 회계, 리더십 등 단계별 체계적 역량강화 지원(5회 150명)</li> <li>-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케이터링 전문가 양성'(30명, 농진청), '여성 농식품 유통리더십 양성' 교육 추진(50명, 유통교육원)</li> </ul> </li> <li>○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정원, 농진청 등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비율을 30%까지 상향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li> </ul> </li> <li>○ 교육도우미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교육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도우미 활용현황, 교육기관에 보육인력 배치 등 여성농업인의 교육활성화 환경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li> </ul> </li> </ul>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촌여성정책팀 시행계획 보고서.
2020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p>&lt;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gt; (6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을 통한 여성어업인 맞춤형 전문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촌으로 찾아가는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여성어업인 리더십 개발 및 정부시책 홍보(연중 4회, 200명)</li> </ul> </li> <li>○ 여촌지역 개발리더 교육을 통해 여성어업인에게 리더 역량을 교육하고, 교육 수요 반영하여 여성 참여율* 제고 노력(연중 4회, 1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교육생 비율(%) : ('17) 82 → ('18) 60 → ('19) 49 → ('20년 목표) 60</li> </ul> </li> <li>○ 젊고 우수한 여성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협의하여 수산후계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여학생 지원 방안 논의(7월)</li> </ul> </li> </ul>	해양수산부(2020), 소득복지과 시행계획보고서.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및 원어민 장학생 배치 확대**’ (p.52)에서,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진로교육을 하지 않도록 진로교육 담당자의 성 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는 대부분 **몰성적(gender-blinded)**으로 제시되어 있음.

\* (p.50) ‘**농어촌출신대학생 기숙사**’ 건립 추진 검토,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

금 및 농업인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농수산후계인력 장학금 규모 확대 추진' 등

- 이것은 사업을 구체화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 이에 향후 정책과제 이행점검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이행 점검 필요. 그리고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 성별에 따른 현실과 특성, 정책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p.54)에서도 농어업인 대상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농어촌 지역 양성평등 전문인력 육성을 제시하고 있음.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정책 등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여성농업인 양성평등 전문강사 육성 추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조) ※ 2020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함

○ 농촌형 성평등 교육 확대 필요

- 농식품부, '농촌형 특화 성평등 교육' 확산(한국농정, 2019. 11. 17.)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상호업무협약(MOU). 협약의 중점 내용은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대상 성인지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 확대 △농촌지역 성평등 및 폭력예방을 위한 콘텐츠 활용 등
- 충북 음성군 여성농민회가 주최한 '미디어로 보는 성평등' 강좌를 통해 여성농민들이 일상 속 성차별을 체감하고 성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이장단 교육, 지도자 교육 등 남성 대상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 (한국농정, 2020. 02. 02)

○ 충북 음성군 여성농민회가 주최한 '미디어로 보는 성평등' 강좌를 통해 여성농민들이 일상 속 성차별을 체감하고 성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한국농정, 2020. 02. 02.)

- 이장단 교육, 지도자 교육 등 남성 대상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

○ 농촌지역 여성교육을 위한 e-러닝 활성화(안수영·권용대, 2015)

- e-러닝 센터 구축,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습자 수준별 다양한 콘텐츠 마련, 학교,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복지관 등과의 연계 학습
- 여성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e-러닝화
- 정부의 정책적 지원



## 2-3. 농어촌 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및 소외 지역 지원 강화를 통한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 2-4. 주민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및 향토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 문화 공동체 활성화
- 향토 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

### ② 젠더 이슈[2-3, 2-4]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충남 여성농업인 일,생활균형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생각하는 일과 생활 균형은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84.0%), 일과 가족과의 생활균형(56.9%), 일을 통한 개인의 성장(42.1%), 일 이외의 자기계발(35.%) 등으로 나타남. (농업인신문, 2020. 09. 25.)
  - 일생활 균형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의 내용은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확대(10.2%), 여성농업인센터 확대(9.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창업지원 확대(8.5%) 등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은 가족 내 돌봄노동을 총괄하는 등 이중 부담을 안고 있어 일·생활의 균형이 저해되는 관계로,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여성농업인 인식개선 및 리더십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

○ 여성 농업인/어업인 실태조사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안석·엄진영·박지연, 2018:80), 문화행사와 문화시설 이용도를 보면, 여성농업인 전체 중 67%는 문화행사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은 40.2%로 나타나고,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시설 이용률이 높음. 문화행사 혹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 부족>경제적 부담>교통 불편 등이었고, 문화생활의 애로사항은 경제적 상황(30대), 농사일과 가사일로 인한 시간적인 이유(4-50대), 교통과 건강(70대)이라고 응답함.
-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임우연 외, 2017), 첫째, 문화체육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보면 문화체육시설 이용 경험은 46.9%가 있음, 이용 만족도는 긍정 33.3%, 부정 10.0%로 나타남. 둘째, 문화여가활동 참여여부 및 만족도를 보면, 관람(52.5%) 만족도 3.35, 문화활동(46.6%), 만족도 3.34, 친목도모(69.7%) 만족도 3.69 등으로 나타남. 친목도모의 경우 40대 이하 참여율은 95.9%로 매우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군지역보다 시지역 응답자의 경우가 높게 나타남

○ 인권위는 농촌노인 인권증진은 여가·복지기능 강화부터해야 한다고 권고함.

- “농촌 여성노인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재의 상태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겪어온 성차별문제와 노후의 삶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인권증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농민신문, 2019. 06. 21.)
- 가부장적인 문화 등으로 여성농민의 가사 및 농업노동 부담률이 높고 은퇴연령이 늦지만, 농촌 여성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노력은 부족한 실정.

○ 정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농촌노인의 복지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농민신문, 2019. 06. 21.)

- 농촌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 마련, 여성노인의 인권 개선 등을 권고함.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관련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p>&lt;다. 여성농업인의 문화 접근성 강화&gt; (14쪽)</p> <p>○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추진</p> <p>- ‘여성농업인의 소소한 일상 과 역경 극복 사례’라는 주제로 수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문예활동 기회 제공 및 의욕 고취</p>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촌여성정책팀 시행계획

제목	관련 내용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바우처카드 취급기관 개선으로 여성농업인 접근 편의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에 바우처카드 취급 신청을 하여 여성 농업인의 접근 편의 도모</li> </ul> </li> <li>○ 농촌 주민참여 맞춤형 ‘소규모 문화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가·악기 연주·공예 등 여성농업인이 선호하는 문화활동에 대한 교육·문화 강사 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20: 190개소)</li> </ul> </li> <li>* 여성농업인센터, 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활용 문화 순회 서비스 등 제공</li> </ul>	보고서.

- 해수부의 관련 여성어업인 정책 발견하지 못함
- 그러나 지자체가 여성어업인 행복/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사례 있음(제주도 ‘행복바우처’, 삼척시의 ‘복지 바우처’, 진도군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등)
- 여성농어업인이 문화 생산자/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 필요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생활문화센터 조성’ (p.55)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성별 특성 반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p.55)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2024년까지 매년 220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와 인력양성 중요. 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치 지워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는 대부분 물성적 (gender-blinded)으로 제시되어 있음.
  - \* (p.57) ‘생활문화공동체 및 동호회 활성화’, ‘공동체 촉진 인력 양성(24년까지 매년 130명의 지역 예비 문화 리더 양성)’ 등
  -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 이행점검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이행점검 필요. 그리고 향후 시행계획 수립시 성별에 따른 현실과 특성, 정책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경북 상주시 모동면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책 이외 각종 강좌나 모임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며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킴.(매일신문, 2020. 08. 10.)
- 제주도 ‘제주마을 소도리 문화연구소’는 동네주민들이 모여 마을신문을 제작하고 라디오 녹음 등을 함.
  - 이와 같이 주민들 스스로 문화공간을 만들거나, 귀농 귀촌인들이 재능기부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3-1.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 교통모델 고도화 · 다양화
- 농어촌 지역 교통안전 확보

### 3-2. 농어촌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및 난방 등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① 주요 정책과제

-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 3-3.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 첨단 기술 기반의 정주환경 고도화 및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촉진

#### ① 주요 정책과제

-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 농어촌 지역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계층 대상 농어촌 임대주택 조성
- ICT 기술을 활용한 정주기반 고도화

## 3-4.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힐링 공간으로서 농어촌 공간 가치 증진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환경자원 활용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② 젠더 이슈[3-1 ~ 3-4]

- 농촌거주 장애인 여성독거노인의 맞춤형 주택개조안 모색(이연숙·박지선·이학성·김윤수, 2017)
  - 조사 결과 맞춤형 주택개조의 두 측면인 노후화된 물리적 주택 특성과 거주자의 건강 제반·장애 및 생활특성이라는 고유의 상황에 따라 개조안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
  - 이는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해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주택개조 가이드라인, 지침 등과 같은 제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계획과 실행에 있어 유연한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함.
  - 특히, 주택의 노후도가 심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빈곤가구의 경우, 예산의 한계는 주택개조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 빈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세심한 접근방법을 통한 개조 계획이 매우 중요함.
  - 맞춤형 개조를 위한 개선 방안
    - 주택개조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 거주자의 환경과 주택을 심층적으로 이해한 뒤 개조 계획을 도출할 것,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참여를 통해 개조 계획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효과적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주택개조의 목적은 현재 거주자와 주택의 상황을 해결하며, 거주자의 신체적 기능 쇠퇴를 늦추고 유지하는 것뿐 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또한, 개조실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고려해야 함.

- 농촌가구주의 고령화, 여성화 및 가구의 소가족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농촌 거주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유형 개발과 함께 마을단위의 종합계획에 의거한 농촌정주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최명규, 2012).
- 전원마을조성사업이나,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등에 의해 새로운 집합주거단지가 개발되고 있으나, 도시에 적용했던 계획방법을 농촌에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농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 경관과 산림의 훼손, 입주민의 안전 문제, 농촌마을의 질서 파괴 그리고 미적 환경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도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신규택지 개발방식보다는 기존마을 정비방식으로 정책적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어업인 실태조사
  -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안석·엄진영·박지연, 2018:88), 농촌 거주 의향과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일반농의 92.3%, 고령농의 94.6%, 귀농의 91.0%가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나, 다문화 여성은 50.8%만이 의향이 있다고 밝힘.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있어 건강에 좋다’, ‘도시생활보다 여유 있다’는 의견이 각각 18.3%, 16.4%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음. 제시된 이유 중 ‘쾌적한 자연환경’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여성농업인은 쾌적한 자연에 둘러싸인 안정감을 농촌생활이 주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결과(임우연 외, 2017)에 따르면, 어촌 거주 시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음. 일손 부족(26.3%), 문화적 혜택(16.3%), 어촌 자연환경 악화(16.3%), 의료시설 불편(14.4%) 순으로 나타남. 거주하는 주택이나 교통, 도로 여건 등에 대해서는 불편사항 언급 없음.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관련 정책 : 발견하지 못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다양한 시설·공간, 주택, 생활 SOC 시설 확충, 3·6·5 생활권\* 구현을 제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성별 생활특성과 이동성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p.68)
- (농어촌지역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시로서) 공공시설·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별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 2020:168-187)

- 예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별 차이: 여성은 남성보다 도시공간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특히 야간보행).
- 예 2) 여성의 돌봄 역할과 시설·공간 이용의 어려움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하는 경향이 많아 시설·공간에 대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함
- 예 3) 이동 패턴의 성별 차이 : 취업남성의 이동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많고, 승용차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 4) 재난대처 능력에서 성별 차이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재난대처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재난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회 적고,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임.
- 예 5) 지역 공간조성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 :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모색 필요(모니터링, 설문조사, 간담회 등)

## 4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4-1.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 농어촌 융복합산업 고도화, 관광 활성화 및 푸드플랜 체계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 다각화

#### ① 주요 정책과제

-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 고도화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푸드플랜 체계화

#### ② 젠더 이슈

- 성평등 실태조사에서 다양한 여성농업인 관련 이슈 대두 : 법·제도적 지위 개선, 경영주로서의 지위, 가정폭력 예방 및 사후대처 미흡 등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여성농민 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은 여전히 ‘경영주 외 농업인’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농업인신문, 2020. 11. 13.)
-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다(61.0%)와 있다(39.0%)로 나타나며, 농산물 판매시 남성 농민의 이름으로 출하하는 경우(46.3%)가 높고 여성농민 본인으로 출하하는 경우(24.0%)가 상대적으로 낮음.
- 농촌일용노임은 2019년 3/4분기 기준 여성이 3만5천원 낮으며, 월별 적용노임으로 적용해 보면 남녀 임금차이는 월별 88만원 정도로 조사됨.
- 농협조합원이 아닌 경우(40.2%), ‘농협평균 출자금의 너무 높아서’가 조합원이 아닌 이유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70.2%)가 참여하는 경우(29.8%)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마을잔치, 면단위 체육행사 등에서 여성이 하는 일은 음식장만(70.7%)등으로 나타남.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전여농 오순이 정책위원장은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거나 마을 행사 시 음식장만을 여성이 전담한다는 응답이 각각 71.3%, 70.7%였고, 주민자치회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20% 이하 라는 응답도 33.3%로 지역사회 참여가 저조했다”며 “가정폭력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32.6%로 사전 예방교육과 사건발생 후 대처와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농촌여성신문, 2020. 11. 12.)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김옥임 회장은 “공동경영주 비율이 29%로 조사됐지만 진정한 경영주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농촌여성신문, 2020. 11. 12.)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입기반 마련 필요
  - 여성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여성주의 교육의 필요성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위해 로컬푸드 매장 등의 관계망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중부매일, 2019. 12. 19.)
  - 푸드플랜, 농민 목소리 빠진 채 ‘시설 만들기’만 골몰한다는 지적 있음. 오랜 기간 지역 선순환체계를 고민해 온 지역 중소농, 여성농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한국농정, 2020. 9. 6.)
- 농민수당에서 여성은 소외, 개인단위의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구 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여성농민 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가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 농민수당이 ‘농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 (87.7%)이 높게 나타남.(농업인신문, 2020. 11. 13.)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김옥임 회장은 “모든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민수당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농촌여성신문, 2020. 11. 12.)

○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이하 청여농)이 지난 17일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소담농장에서 간담회를 개최(농업인신문, 2020. 9. 17.).

이소희 씨는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주변을 보면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한 뒤 “오히려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따로 개발하기보다, 농식품부에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해 농기계를 임대할 때 인력을 함께 배치해 준다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

-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개발해 여성농업인의 노동 경감 및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행 (농축유통신문, 2020. 1. 3.)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농기계의 수요를 알아야하고 교육을 통해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 회장)”

○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 실태

-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년과 2013년 조사에서 여성농업인들은 영농활동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을 꼽음.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에는 농작물의 품목, 가구 형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엄진영, 김선웅, 2019).
- 품목은 과수, 노지채소, 시설채소, 화훼/특작 품목을 생산하는 여성농업인일수록 영농활동 비중이 상승
- 가구 형태는 단독가구일수록 영농활동 비중이 높았으나, 부부가구이거나 부부가 중심이 된 2세대, 3세대 가구의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비중은 감소함. 가구 내에 돌봄이 필요한 자녀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특히 영농활동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
-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은 감소
-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세대는 45~64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농업인으로, 영농활동 비중에 따른 세대별 정책이 필요
- 영농활동과 가사일의 병행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필요

- 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접근도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 보다는 지자체가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즉 농외소득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제도적으로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접근이 중요함(안수영·권용대, 2015).
- 특히 농촌관광, 마을개발사업, 농산물 가공식품 분야 등에서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도농교류 사업에서도 도시 주부와 네트워킹 파트너로서 활발한 역할을 담당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 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6~2020)	<b>1-1.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b>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추진 ○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b>1-2.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b> ○ 정부·지자체 등 정책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확대 추진 ○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 내실화로 정책 자문기능 강화 ○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 마련 <b>1-3.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b> ○ 유관기관, 협회 및 단체에 성인지 교육 등 확산 ○ 주요 농정시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이행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여성어업인	※ 관련 정책 발견 못 함	해수부
2017~202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 농업주종사 인구 중 여성의 비중 및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정책 확대로 여성 농업인 활동이 점차 다양졌으나, 여성농업인은 가족종사자로 인식되어 남성농업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가사·농업의 병행과정에서 과중한 노동 상황에 처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향상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및 여성농업인 교육과정 내실화 정책 필요 * 농업주종사 인구 중 여성 비율 : ('05년) 51.9% → ('12년) 53.0% → ('14년) 53.4%	법무부 (2017)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여성농업인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향후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농업·농촌 기능이 농산물 생산에서 융복합산업 등으로 전환·확산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밝힘. (뉴스1, 2020. 5. 22.)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 활동 지원 강화방안' 지역토론회 개최(2019. 6. 13.).서 의원은 “농촌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가공 등 융복합산업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활약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이 활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연합뉴스, 2019. 6. 13.)
- 여성농어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이에 관한 정책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지위개선, 지역사회 참여 확대, 리더양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하지 않고 있는 듯.
-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포괄범위가 법·제도적 지위 개선에 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

## 4-2. 농어촌 관광 활성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서비스 인프라 기반 구축을 통해 국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 농어촌 가치 증대

### ① 주요 정책과제

- 지역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 농어촌 관광 인프라 개선

### ② 젠더 이슈

-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 요구(최정신, 최윤지, 윤순덕, 김수림, & 한송희, 2017).
  - 지역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 요구 분석을 통해 농촌 여성의 욕구에 부합한 지역사회활동 참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도출
  -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유형은 크게 교육활동, 지역주민활동, 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결합, 지역사회활동 변화의 5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농촌 여성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활동 참여 연령 및 유형에 따라 가족문제 해소를 위

한 상담·의사소통 중심의 자녀·가족 관련 교육, 양성평등 및 인문학 중심의 시민의식 교육, 여성 리더십·6차산업 중심의 역량강화교육으로 도출되었음.

○ 여성경영주 농가의 농촌관광사업 참여가 농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9).

-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교육 수준이 낮았음.
- 농촌관광사업에의 참여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낮았으며, 경작 면적이 남성의 1/2 수준인 만큼 농축산물 판매금액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판매금액이 높았으며, 농촌관광사업에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농업인의 농축산물 판매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주 특성 요인은 배우자의 존재, 높은 교육수준,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등이었음.
- 농촌관광사업에 참여할수록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높아졌으며, 그밖에 생산자 조직에의 참여, 농기계 보유, 정보화기기 활용 등도 농축산물 판매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 농촌문화 콘텐츠 개발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필요(최락인, 2017)

- 2017년 농촌지역의 명목 농업생산액과 농업부가가치액은 2016년 대비 각각 0.8%,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성장은 정체되어 성장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강화해야 할 시점
-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자연환경과 삶의 방식과 연계하여 보다 창조적인 농촌 문화를 창출하여 새로운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
  - 농촌 6차산업화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소득화하려는 전략을 말하며, 농촌 6차산업화는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관광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
-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의향상, 지역 경관 및 정주환경 개선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수단으로서 관광콘텐츠 개발 전략이 필요
-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약 및 결제 시스템 개발 및 다양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재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와 웰촌 포털사이트의 통합 방안도 검토할 필요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 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6~2020)	<b>4-3.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b> ○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 내실화 ○ 농촌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어업인	※ 관련 정책 발견 못 함	해수부

#### ○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책

-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통식품 제조·가공부터 판매, 농촌체험 등 농업 전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농촌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이 농업의 당당한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친화형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발표(시사저널, 2020. 10. 23.)
- 경상남도,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마련(뉴스타운, 2018. 4. 9.) : 여성 농업인 권리 향상 등 5개 분야 37개 과제로, 총 854억 원의 사업비 투입. 도 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 예정
  - 농촌마을리더 양성교육 및 사무장 교육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도 여성농업인으로 우선 채용할 방침
- 보성군은 지역특화형 ‘여성전문가육성 교육’을 2018년에 실시(프레시안, 2018. 3. 8.)
  - 교육은 가사와 육아로 전문 직장을 갖지 못한 여성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 개발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
  -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체험과 열정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창출로 즐거운 농촌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역사회 의사결정단위에 최소한 30% 이상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있음. 이러한 정책과제도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정책과제로 포함할 필요 있음. 관련부처나 기관은 향후 시행계획에라도 반영할 필요 있음

- 지역사회 여성농어업인 리더 양성 교육 필요
- 음식준비 등 가사노동 성격에 준하는 활동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교육 강사,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필요

- 제4차 삶의 질 향사업 기본계획에 관련 정책과제 제시하고 있으나 성별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향후 구체적으로 정책 집행시 성별특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예)(p.81). ‘지역 자원 연계 강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발굴’, ‘지역 단위 농어촌 관광 협업체계 강화’
- (p.82) ‘농어촌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 여성농어업인 참여를 독려하고 일정비율 이상 의사결정단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4-3.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 청년 및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 증진

#### ① 주요 정책과제

- 청년 취업·창업 촉진
-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
- 농산어촌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 ② 젠더 이슈

- 청년여성농업인 증가 및 정책요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2년간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농업경영체(농업경영주)는 늘어났지만 경영주 이외의 일반 농업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농업인신문, 2020. 4. 3.)
  - 지난해 청년 농업경영주는 4만명으로, 2015년 3만7천명 이후 꾸준히 늘어났고, 여성 농업경영주는 46만6천명으로, 2015년 39만6천명 이후 매년 증가
  - 2020 후계농업인 현황(한국농어민신문, 2020. 4. 21.)
  -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2020년 후계농업 경영인’ 이 경북에서 전국 최다인 220명(전국 1200명의 18.4%)이 선정

-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후계 농업경영인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함.
- 경북도에 따르면 선발된 일반후계농업경영인 220명은 남성 186명(85%), 여성 34명(15%)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창업예정자가 늘고 귀농인이 70%나 돼 청년들이 농업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노컷뉴스, 2019. 4. 14.)
- 2019년 선발한 1600명 가운데 창업예정자가 950명(59.3%)으로 전년 대비 16.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비농업계 졸업생이 1123명(70.2%)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7명(29.8%)의 2.4배 수준을 보였다.
- 성별로는 남성이 1321명(82.6%)이고 여성은 279명(17.4%)
- 농림축산식품부와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이하 청여농)이 지난 17일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소담농장에서 간담회를 개최(2020. 9. 17.)(농업인신문, 2020. 9. 25)
- HACCP(해썹)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해썹 의무화로 마트 등에 판매하기 위해선 해썹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로 시설을 갖춘다 해도 ‘억’ 단위로 시설투자비용이 들어가 소규모 농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 한다고.
- 김민정(충남 서산) 씨는 “식품공장처럼 대량으로 생산·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 가공공장을 차리고 싶은데, 해썹은 시설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도 해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주저하게 된다”며 소규모 농가에 대한 해썹 완화를 제안
- 청년’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고충도 호소. 특히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들에게 청년여성농업인들이 시달리고 있음.  
(자연산 송이를 판매하는데 ‘유기농’ 이냐고 묻고, 현미를 사놓고 밥이 안 된다고 항의하는가 하면, 계란찜을 만드는데 찜이 안 된다고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까지... 또 한 아무렇지 않게 새벽에 전화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 정부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 세부실천 과제로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을 시행 중(에너지경제, 2019. 9. 17.)

-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 2018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안석·엄진영·박지연, 2018),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경영주 인식 비율이 낮음.
  -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81% 정도로 나타났고, 직업적 지위를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도 38.4%로 낮게 나타남.
- 농산물 유통·판매 분야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관심이 증가
  -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야가 가장 큰 분야는 판로결정 분야로 57.6%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농사기술·판매정보임.
- 여성농업인이 농업 이외에 생산 소득을 하고자 하는 의향은 62.5%로 높게 나타남. 특히, 참여를 원하는 분야는 판매 또는 농업임금노동, 가공 분야 순
-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2008년 대비 2013년에 현저히 증가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 밭작물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타 작물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농업인의 정책 요구와 지출되는 예산 비중을 비교하면 서로 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엄진영, 최용호, 박지연, 2018).
  - 정책대안 제안으로, 정책 인지도 개선: 정책 전달체계 개선, 홍보 강화,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개선,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
-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가치에 관한 연구(이선영, 황미진, 2019).
  - 한국생활개선회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가치를 분석함
  -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은 여성농업인·농업·농촌사회의 성장동력으로써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분류
  - 여성농업인의 조직활동은 여성농업인 개인에게 농업·농촌사회가 원하는 리더로서 능력을 신장시키는 조직, 여성농업인의 소득원을 제공하는 조직, 여성농업인의 잠재력과 개성 표출의 장, 여성농업인의 신체·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조직, 그리고 여성농업인에게 열린 배움터로써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사회적 가치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실천하는 조직, 농업기술·경영 전문가를 육성하는 조직,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선도조직, 농촌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주체, 그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학습단체로 분류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 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6~2020)	<b>2-1.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체계 개선</b> ○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관리 내실화 <b>2-2.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b>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 지원 추진 <b>2-3.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b> ○ '20년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25종 추가 개발 ○ 여성농업인의 원활한 농기계 활용을 위한 농기계기술교육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8~2022)	<b>2.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b> 1.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가. 스마트농업 육성 <input type="checkbox"/> 생산에서 유통 소비, 위험관리 등 농업 전반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 4개소) 등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조성 2.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가. <b>청년농을 중심으로 미래인력 육성</b> <input type="checkbox"/> (정착) 영농의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고, 정착지원금·농지·금융·교육·농기계 등 종합 지원 <input type="checkbox"/> (성장) 기술고도화, 규모화 등을 통해 전문경영체로 성장 유도 <input type="checkbox"/> (지원체계)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수립 의무화, 청년창업농 선발·지원·관리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pp.30-34)
여성어업인	※ 관련 정책 발견 못 함	해수부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제의 성별특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정책 수혜가 성별에 따라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예) (p.83). ‘청년 취업·창업 촉진’ 일환으로 농어업법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법인 취업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제공 및 정규직 전환 유도  
 ‘청년 창업농 실습 농장 지원(연간 30개소)’,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지원 강화’ 일환으로 22년까지 청년동 1만명 육성 목표로 영농정착지원금, 임대농지, 창업자금 등 종합지원
- (p.84). ‘귀어 창업·주택자금 지원 확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 등
- (p.86). ‘농산어촌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일환으로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500명 육성 등

## 4-4.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 및 일손 부족 해소

### ◇ 다문화·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및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① 주요 정책과제

- 농어촌·다문화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② 젠더 이슈

-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 2018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안석·엄진영·박지연, 2018), 여성농업인이 인지하는 정책인지도에 대한 사업별 조사 결과, 가장 낮게는 6.1%, 높게는 39.4% 수준으로 편차가 큰 편 젊은 여성농업인 그리고 다문화 여성농업인들이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높았음.
  - 여성농업인이 인지하는 정책인지도에 대한 사업별 조사 결과, 가장 낮게는 6.1%, 높게는 39.4% 수준으로 편차가 큰 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연구'(연합뉴스, 2019. 2. 18.)
  -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43%가 농촌사회의 소득계층이 양극화돼 있다고 인식
  - 농촌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일자리 및 돈벌이 기회의 부족'(47.7%),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18.1%) 등을 지목했으며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16.2%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
  - 여성 결혼이민자의 23.2%, 귀농·귀촌인 14.2%는 기존 지역 주민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현재 삶의 질의 관련해 여성 결혼이민자는 48.3%, 귀농·귀촌인은 62.6%가 만족
  -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현행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은 ▲ 동화주의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적 관점 ▲ 협소한 다문화가족 정책 대상의 범위 ▲ 부족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 제한적인 한국어 교육 ▲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 부족 ▲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 및 사회보장 기회의 제한 등으로 나타났음.

-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은 ▲ 인구 유치에 집중된 귀농·귀촌 정책 ▲ 귀농·귀촌 관련 지원에 대한 오해 ▲ 부족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 상호이해 교육 부족 등이 지적됨.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요인(김복태·최천근, 2020).
  -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
  -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
  -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어야 할 것임.
-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방안 연구(조원지, 정호중, 2020).
  - 농촌사회의 생산인구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노동시장에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인력으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노동시장의 주변인으로 인식되어 역량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수행능력은 농업·농촌 노동시장에서 결혼이주여성에 게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함. 한국어수행능력은 구직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희망직종 구직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의 모습을 보임.
  -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은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일자리 정보 부족, 교육·훈련을 위한 시간 부족, 일·가정 양립, 사업주의 낮은 다문화감수성 등으로 나타남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직업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자신의 미래설계 및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③ 성평등한 개선방안

#### ○ 관련정책

제목	관련 내용	출처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6~2020)	전략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이 지역공동체에 정착하기 위한 주민과의 융화노력 필요 ○ 여성농업인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소속 회원 중 귀농·귀촌 여성 농업인, 결혼이민여성의 참여가 제한적 ○ 결혼이민여성은 대부분 농사경험이 적고, 국내 문화에도 생소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 결혼이민여성 중 결혼 전 농사경험 여성은 전체의 절반 수준, 농업종사기간 1년 미만 대다수('13. 여성농업인통계조사) <b>5-3.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b> -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영농교육 확대 - 결혼이민여성의 한글, 생활교육 등을 통한 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창업 서비스 등을 내실화 하여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 ○ <b>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b> - <b>결혼이주여성 정착단계별 농업교육 확대 운영</b> - <b>지역단위 농촌여성조직체 내 다문화여성 분과모임 가입 및 활동 지원</b> * 기초농업기술, 전통·향토음식, 농산물가공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 - <b>결혼이주 여성농업인 - 내국인 여성농업인 멘토링 결연 지원</b> * 상호소통교육, 멘토-멘티협약, 가정경영·생활문화·영농 애로사항 등 농촌생활적응 심층지원 - <b>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농가도우미 연계 서비스 제공(지자체)</b>	여성가족부 (pp.17-18)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8~2022)	<b>나. 여성 농업인의 위상 제고</b>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도우미 지원 확대, <b>결혼이민여성대상 1:1 후견인제 등 맞춤형 복지 제공 추진</b> * ('18) 연구용역(검진항목, 비용등) →('19~'2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21) 시범사업 ○ 도우미 지원범위 확대(출산 사고 질병 취약가구 → 교육도우미 추가), 지원단가 인상(6만원 → 7만원), <b>결혼이민여성 멘토·멘티 풀 1천 건 구축</b>	농림축산식품부 (p.65)
여성어업인	※ 관련 정책 발견 못 함	해수부

#### ○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정책 로드맵 제안(조원지, 정호중, 2020).

##### - 진입, 선택, 참여, 주체 4단계로 이루어짐

- 진입과정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선택의 다양화를 증진시키고자 함.
- 선택단계는 농업·농촌 변화와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 기회를 높이는 정책을 기반으로 직업 가치관과 가치를 제시하고자 함.

- 참여단계는 기존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주체화 단계는 일자리정책의 궁극적 목표로서 농업·농촌사회의 주체자로서 결혼이주 여성의 자생력과 조직화를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생태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관련 정책으로 ‘농촌형 새로일하기센터 확대’를 통해 농어촌 여성 및 다문화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p.8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여성 취업지원은 다문화 여성의 취업지원을 넘어선 좀 더 폭넓은 여성농업인 대상층을 포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III.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추진체계의 성별균형 참여 반영 필요

1.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경과 중, 핵심과제 참여 인원 성별

▶ 전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됨

2.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의 연구위원 성별

▶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엄진영 연구위원을 제외한 인원이 모두 남성으로 확인(정희라 연구조원은 확인 불가)

(출처: 송미령 외(2019),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약칭 삶의 질 위원회)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삶의질 향상위원회

<http://www.krei.re.kr/committee/contents.do?key=465>. 2020.11.13. 인출

○ 성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 주요 기능과 활동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과 관련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 조정
-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정세균)
- 위 원 : 전체위원 25명 중 15명이 각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
  - ▷ 정부위원(당연직)

<b>홍남기</b> 기획재정부 장관	<b>유은혜</b> 교육부 장관	<b>최기영</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b>진영</b> 행정안전부 장관	<b>박양우</b>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b>김현수</b>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b>성윤모</b>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b>박능후</b> 보건복지부 장관	<b>조명래</b> 환경부 장관	<b>이재갑</b> 고용노동부 장관
<b>이정숙</b> 여성가족부 장관	<b>김현미</b> 국토교통부 장관	<b>문성혁</b> 해양수산부 장관	<b>박영선</b>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b>노형욱</b> 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위촉직) (성별구성 ??)

<b>이성희</b>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b>임준택</b>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b>김제열</b>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직무대행)	<b>이명자</b>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장	<b>김홍상</b>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b>이정화</b>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b>김민희</b> 대구대 교육대학원 교수	<b>오형은</b>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b>이선철</b>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수)
- 정부위원(당연직) : 21명

<b>김용범</b> 기획재정부 제1차관	<b>박백범</b> 교육부 차관	<b>장석영</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b>윤종인</b> 행정안전부 차관	<b>오영우</b>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b>이재욱</b>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b>정승일</b>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b>김강립</b> 보건복지부 차관	<b>홍정기</b> 환경부 차관	<b>임서정</b> 고용노동부 차관
<b>김희경</b> 여성가족부 차관	<b>손명수</b> 국토교통부 제2차관	<b>강성천</b>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b>김양수</b> 해양수산부 차관	<b>차영환</b> 국무조정실 제2차장
<b>강신욱</b> 통계청장	<b>민갑룡</b> 경찰청장	<b>김경규</b> 농촌진흥청장	<b>박종호</b> 산림청장	<b>정문호</b> 소방청장
<b>김홍희</b> 해양경찰청장				

○ 민간위원(위촉) :15명 (성별구성 ??)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심영 송의여대 가족복지과 교수	이순주 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본부장	박덕병 공주대학교 지역개발학부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성우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손병창 나사렛대 재활공학과 교수

#### 4. 이행점검 체계

- 이행점검 지표 및 점검포인트에 성별 특성과 정책요구 차이 등이 반영되어 점검할 필요 있음.

※ 이행점검 지표와 점검포인트에 대해서는 본 발표문에서 분석하지 못함

#### 《참고문헌》

- 김민정·박기수(2019),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농촌여성노인의 노쇠에 미치는 효과. 농촌의학·지역보건, 44(3): 115-123.
- 김유진. (2016). 지역 공동체 내에서 나이 들어가기 관점에서 살펴 본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1): 251-273.
- 김은경(2015), 농촌거주 여성독거노인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도시 여성독거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4(6): 811-827.
- 김은설·이정원·박진아·조혜주. (2014).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박경순·박영란(2016), 농촌 노인의 사회연결망과 건강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1): 189-213.
- 송미령 외(2019),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신소희·장금성·최은(2019),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4(2): 198-205.
- 신옥순(2019), 농촌 지역 여성 노인의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복지감의 조절 효과. 한국보건복지융합연구, 11(1-2): 57-81.
- 안석·엄진영·박지연(2018),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 안수영·권용대. (2015). 농촌지역 여성교육을 위한 e-러닝 활성화 방안. 농업과학연구, 42(3): 277-283.
- 안수영, & 권용대. (2015).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결정요인 분석: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2(3), 277-283.
- 엄선희 외(2017). 여성어업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해양수산부.
- 엄진영, 김선웅. (2019).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별 영농활동 비중 결정요인 분석. 농촌경제,

42(4), 1~21.

- 엄진영, 최용호, 박지연 (2018).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윤순덕·채혜선. (2016). 농촌마을의 비공식적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2): 297-308.
- 이선영, 황미진. (2019). 여성농업인 조직활동의 가치에 관한 연구:한국생활개선회 60년 활동 가치에 관하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26.
- 이연숙 · 박지선 · 이학성 · 김윤수. (2017). 농촌거주 장애인 여성독거노인의 맞춤형 주택개조안 모색.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6(3): 71-80.
- 임덕규(2018), 부안군 면단위 소규모 보육과 돌봄사례. 제1차 전북 성평등 정책포럼 자료집, pp.25-32.
- 임우연 외(2017), 2017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9). 여성경영주 농가의 농촌관광사업 참여가 농업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연구, 34(8), 27-45.
- 조원지, 정호중. (2020).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일자리 참여 지원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최락인. (2017). 지역사회 농촌문화 콘텐츠 개발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6), 661-670.
- 최은희(2018), 충남 농어촌 마을단위 육아지원 모델개발 사례. 제1차 전북 성평등 정책포럼 자료집, pp.7-14.
- 최정신, 최윤지, 윤순덕, 김수림, & 한송희. (2017). 농촌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 요구 분석. 관광연구, 32(6), 293-315.

#### <언론기사>

노컷뉴스. (2019. 4. 14.). 청년들이 농업에 유입되고 있다..영농 창업예정자 증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134440>. 2020.11.13. 인출

농민신문. (2019. 06. 21.). “농촌지역 초고령사회 진입...경로당 복지기능 강화해야”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12594/view>. 2020.10.22. 인출

농업인신문. (2020. 09. 25.). 여성농업인, ‘워라벨’ 원한다.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18>. 2020.10.22. 인출

농업인신문. (2020. 9. 17.). “여성농업인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어야” .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416>. 2020.10.22. 인출



농업인신문. (2020. 11. 13.). “여성농민, 여전히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73>. 2020. 11. 13인출

농업인신문. (2020. 4. 3.). 귀농, 청년·여성창업, 농업경영주 늘었다  
<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75>. 2020. 11. 13인출

한국농어민신문. (2020. 4. 21.). 2020 후계농업인 ‘경북 220명’ 최다전국 1200명의 18.4% 달해.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368>. 2020. 11. 13인출

농촌여성신문. (2019. 10. 25.). 세월이 흘러도 여성농업인 건강안전은 여전히 뒷전.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00>. 2020.10.21. 인출

농촌여성신문. (2020. 11. 12.). 여성은 농민수당 그림자에 불과  
<https://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70>. 2020. 11. 13인출

농촌여성신문. (2020. 11. 12.). 여성은 농민수당 그림자에 불과.  
<https://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70>. 2020. 11. 13인출

농축유통신문. (2020. 1. 3.). [2020신년기획]여성농업인정책 어디까지 왔나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93>. 2020.10.22. 인출

뉴스1. (2020. 5. 22.).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융복합 산업전환…여성농업인 역할중요“  
<https://www.news1.kr/articles/?3942789>. 2020.10.22. 인출

뉴스타운. (2018. 4. 9.). 경상남도,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마련.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21>. 2020. 11. 13인출

매일신문. (2020. 08. 10.). [별별 농부연습] 5. 포기할 수 없는 문화생활.  
<http://news.imaeil.com/CultureAll/2020080915012249549>. 2020.10.22. 인출

세계타임즈. (2020. 03. 12.). “여성농업인의 육아복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http://www.thesegeye.com/news/newsview.php?ncode=1065610456197674>. 2020.10.21. 인출

시사저널. (2020. 10. 23.). 김영록 전남지사 “여성친화 농정시책 적극 발굴할 것”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93>. 2020. 11. 13인출

신세계 보건복지통신. (2017. 01. 17.). 농촌여성 안전 위한 환경 개선 시급  
<http://www.xinsega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67> 2020.10.21. 인출

신아일보. (2018. 12. 28.). “사회적 농업, 취약계층 돌봄·농촌공동체 활성화 기여”.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939>. 2020.10.21. 인출

에너지경제. (2019. 9. 17.). 안동시, ‘청년 농업인육성 정책’ 성과 나타나.  
<http://www.ekn.kr/web/view.php?key=453362>. 2020.11.13. 인출

여수투데이. (2017. 02. 13.). 여성 어업인 작업 환경 열악...어가 장비 개발해야.  
<http://www.yst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 2020.10.21. 인출

연합뉴스. (2019. 06. 14.). 인권위 “농어촌 평생교육·경로당 지원 확대 근거 마련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4061700004>. 2020.10.22. 인출

연합뉴스. (2019. 6. 13.). 서삼석 의원,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121300054?input=1195m>. 2020.10.22. 인출

연합뉴스. (2019. 2. 18.). 여성 결혼이민자, 귀농·귀촌자 절반은 “농촌 소득 양극화”.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8119600054?input=1195m>. 2020.11.13. 인출

중부매일. (2019. 12. 19.). 청주YWCA, 여성농업인 경제 활성화 증진 농·소·정 간담회.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422>. 2020.10.22. 인출

충청남도미디어. (2015. 09. 24.). 농촌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그룹 홈이 대안일까?  
[http://www.chungnam.go.kr/multi/multiMedia.do?article\\_no=MD0000826382&med\\_action=view&email\\_addr=uytn24@hanmail.net&mnu\\_cd=CNM MENU01149&orderby=REG\\_DATE](http://www.chungnam.go.kr/multi/multiMedia.do?article_no=MD0000826382&med_action=view&email_addr=uytn24@hanmail.net&mnu_cd=CNM MENU01149&orderby=REG_DATE). 2020.10.21. 인출

충청남도미디어. (2020. 02. 20.). 홍성군, ‘여성’이 행복한 농촌 만든다.  
[http://www.chungnam.go.kr:8100/multi/multiMedia.do?article\\_no=MD0001548108&med\\_action=view&mnu\\_cd=CNM MENU00006](http://www.chungnam.go.kr:8100/multi/multiMedia.do?article_no=MD0001548108&med_action=view&mnu_cd=CNM MENU00006). 2020.10.21. 인출

충북일보. (2020. 07. 28.). “육아공백 메울 돌봄정책 적극 마련해야”  
<https://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631027>. 2020.10.21. 인출

쿠키뉴스. (2020. 02. 24.). 여가부, 함께 양육하는 ‘돌봄 공동체’ 지원한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2240035>. 2020.10.21. 인출

투데이안. (2018. 05. 04.). 진안군, 농촌여성 안전보조구 지원 ‘호응’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47>. 2020.10.21. 인출

프레스리안. (2014. 02. 11.). 농업인 절반은 여성,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해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13976?no=113976#0DKW>. 2020.10.21. 인출

프레스리안. (2018. 3. 8.). 보성군, 지역특화형 ‘여성전문가육성 교육’ 추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8350?no=1883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8350?no=1883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0.11.13. 인출

한겨레신문. (2019. 06. 14.). 농촌 여성 노인, 남성보다 건강 상태 나쁘고 우울감 높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7924.html#csidxace04c533b0fb339077c34b0042dbc7](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7924.html#csidxace04c533b0fb339077c34b0042dbc7)

한국농정신문. (2019. 09. 29.) 취약한 농촌 의료시설, 여성농민 병 키운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86>. 2020.10.21. 인출

한국농정신문. (2020. 04. 05.). 농촌지역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줄여야.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48>. 2020.10.21. 인출

한국농정. (2020. 02. 02.). ‘여성으로 농촌에서 살아가기’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927>. 2020.10.22. 인출

한국농정. (2019. 11. 17.). 농식품부, ‘농촌형 특화 성평등 교육’ 확산.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269>. 2020.10.22. 인출

한국농정. (2020. 02. 02.). ‘여성으로 농촌에서 살아가기’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927>. 2020.10.22. 인출

한국농정. (2020. 9. 6.). 푸드플랜, 농민 목소리 빠진 채 ‘시설 만들기’ 만 골몰.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76>. 2020.10.22. 인출

홍천뉴스. (2016. 06. 22.). 농촌지역 여성안전이 위협하다.  
<http://www.hcsinmo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7>. 2020.10.21. 인출